민중과 호흡하는 진로모색

'변한 상황 인정, 변화 과장은 변명'

대중의 삶 함께하는 구체적인 방향 절실

민족민주운동의 진로 일시:4월16일 장소:홍사단

민족민주진영이 왜 국민에게 대안세력으로 다가서지 못했으며 위기의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하는 문제제기는 위기론이 대두되었던 바로 그 시점으로부터 시작하여 민민진영을 붙잡고 있다.

지난 4월16일 사월혁명연구소가 주최한 '민족민주운동의 진로'는 그 논의가 공개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과 김근태 전 국민회의 집행위원장의 '국민적 정치조직' 건설에 대한 많은 토론을 불러일으키리라는 점때문에 그의미가 깊다고 하겠다.

'민족민주운동의 진로'에 대한 주제발표에서 김근태씨는 먼저 대중적 영향력이 저하되어온 이유로 민족민주운동이 87년 이후 주관적 열정주의로 말미암은 전술적 실패와 전략적 오류라고 지적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87년 6월항쟁을 6.29라는 전술적 후퇴로써 대응한 지배세력에 대해 전략적 우위에 서있었다는 정세판단의 착오를 저질렀고 △운동의 당면목표를 '진보대 보수'로 과도하게 높게 설정한 관념적 급진주의 경향과 △정치시업과 대중사업의 긴장된 통일을 구축지 못한점 △대중운동의 자연발생성에 활동가의 굴복, 즉 대중이 자신의 직접적 이해를 넘어서 전 계급적이고 국민적 이해를 같이하는 대중운동을 펼치지 못하는 대중운동의 초기단계임에도 불구하고 활동가들은 그러한 대중운동의 자연발생성을 극복하지 못하고 동요되었다는 점 △87년 이후 요구되어졌던 운동방법의 변화 필요성에 탄력성 있게 대응하지 못하여 끝내 대중성을 확보하지 못한 점 △민족민주운동 진영이 분열됨으로써 민민진영은 투쟁하는 정치세력일 뿐 국민에게 대안세력으로 다가서지 못했다는 점 △준비미비로 독자정당과 독자후보 전술의 좌절과 실패 등 7가지 요인을 들었다.

오늘의 정세에 대해 김씨는 기본적으로 지배세력은 변하지 않았고 정권구럽과정에서 용공음해 기도와 지역패권주의에 의한 '지역감정심화'를 불러일으킨 점이 정권이 정당성에 큰 걸림돌이 되어 있고, 또한 변화와 개혁의 이벤트성, 국민대중의 참여봉로 경여, 제도화·입법화의 미비등은 정권에 대한 신뢰에 한계를 갖게 하므로 결국 김영삼정권의 본질적 한계는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변한 것은 없다'는 논리로 기존의 운동방식을 그대로 지속하고자 하는 관성적 경향은 단호히 비판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렇다면 관성적 경향을 타파하고 이른바 전략적인 재검토와 전술적인 변화를 이루기 위해 민민진영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답은 쉽게 내려질 수 없고 또한 쉽게 찾아서도 안될 것이다. 대중운동이 상당한 전략적 분화가 이루어진 상태이고 혼선이 진행되고 있다고 인정하면서 김씨는 그동안 축적되어온 실천역량의 계승과 아울러 오류를 타파하는 변화를 위해서는 현상황의 인식에 대한 민민의 합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첫째, 민주 대 반민주의 대립구조가 현저히 약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물론 국가기구의 민주화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은 아니다. 독립기구의 위상이 저하되고 있으며 김대통령의 '개혁 드라이브'가 불러일으킨 일련의 조처들은 국민들에게 가시적으로 정치군부와 공안세력이 권력의 핵심에 복귀할 가능성이 희박해짐을 드러내면서 '민주 대 반민주'의 대중적 설득력이 감소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도 민주 대연합은 필요하며 철차적 민주주의를 옹호하는 세력과 개혁적 세력, 진보적 세력의 대연합은 아직도 효과적인 문제이다. 물째, 오늘의 통일운동의 핵심적 내용은 평화체제 구축과 비핵지대화 실현, 군축의 진전 등이다. 세째, 정세의 변화는 기동적 운동에서 진지적 운동으로 변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즉, 대중의 동의와 지지에 기초한 헤게모니 지배운동은 적극적으로 대체해야 하는 것이다. 네째, 정치 운동과 사회운동의 분화, 괄견이 요구되고 있다. 대중운동과 정치운동은 독자적이면서 동시에 내용적으로 통일될 수 있어야 한다. 분화 발전 속에서의 정치적인 위상은 공개비제권에 있어야 한다. 국민적 대표성을 갖는 인사와 활동가, 전문적 지식인 계층과 양심적 시민을 폭넓게 결합함으로써 대중조직의 방향과 정치적 통합을 지원해야 하며 또한 제도 정치 영역에로의 성공적인 진출이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정치적 국민운동체 건설이 시급한 것이다.

김근태씨가 민족 민주운동의 대중적 영향력이 약화된 원인으로 지적한 몇가지에 대해 토론자들은 대체로 동의하면서도 몇가지 이견을 제시했다.

위상덕 전교조 수석 부위원장은 87년 6월 항쟁당시 운동내부에 지배세력에 대해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은 착오가 아니었으며 주류 자세 판단은 옳았다는 주장을 폈고 전체적 진단이 민민운동의 성과를 도외시했다는 느낌을 전하면서 민민진영의 총량은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군부세력을 중식시키고 의사문민정부를 출범시킨 것도 근본적으로는 민민진영의 역량으로써 얻어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활동가들이 대중운동의 자생성을 극복하려는 노력을 충분히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 발전가능성을 가지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부영 민주당 최고 위원은 지배세력 내부의 일부를 개편함으로써 자신의 체제를 구축하고자 하는 우리나라 정치상황은, 세계적으로 사회주의의 위기가 해소되고 그 대신 차세대의 위기감을 느낀 지배세력의 체제구축노력과 통한다고 전개하고 운동내부의 진행양식이 객관적 국제 정세 흐름과 불일치하는 괴괴과 주관사이의 거리가 바로 의사문민정부하의 민민진영의 어려움이라고 진단했다.

황인성 전국연합 상임집행위원장은 운동의 대중적 토대가 확대되어 왔고 그만큼 기초적 생활권에 대한 요구가 정치적 요구 수준으로 높아짐으로써 조직적 대중운동의 필요성이 절실했으나 그러하지 못했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대중적 영향력 축소의 문제는 그 내용을 돌어 보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근태씨의 현정세와 아울러 관단한 민민운동의 위기감에 대해 토론자들 대수가 동의했으나 문성현 전노협부위원장은 문민정부와 개혁에 대한 위기감이 과장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임금억제와 해고 노동자 복직문제 등 김영삼의 노동정책의 본질은 확실하며 그렇기 때문에 노동자들의 현정권에 대한 인식은 정확하다고 주장했다.

유상덕씨는 민주대 반민주의 대립구도가 약화된것은 사실이나 민주의 개념을 정치적 측면뿐만 아니라 경제 생활적인 부분까지로 확대시켜 새로운 민주대 반민주의 정립구도를 구체화하는 것이 필요하며 정치사회운동이 분화 발전됨으로써 앞으로 민주적 국민정당의 당원들의 자발적인 인식을 바탕으로 한 구체적 결합 방도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부영씨는 민민진영의 정치투쟁 일변도에서 탈피하여 대중의 삶과 결부한 여러운동 방향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또한 제도권이라 하여 도외시한 부분들은 이젠 제도권내 개혁세력가지도 포함해 일반 민주주의의 장치를 확보해 나가는 활동도 겨극적으로 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근태씨가 제안한 국민적 정치조직의 건설은 건설시기부터 그 방법까지 많은 논의의 필요성을 남겨놓고 있는 것만큼 토론자들의 의견 또한 다양했다.

정치조직의 성격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문성현씨는 정치조직이 가져야할 진보성이 절차적 민주주의의 과도한 강조로 매몰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면서 현재의 상황 아래에서는 전국연합의 조직적 강화를 통한 정치조직의 건설을 주장했다.

현재 우리국민이 느끼고 있는 변화감의 실태는 과연 무엇인가, 운동전선의 분화를 어떻게 과악할 것이며 김근태씨가 제안하는 정치조직의 건설은 과연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

이런물음을 계속하는 과정속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사회자인 황건 연구소 연수위원장의 말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변한 상황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는 반운동적 반역사적 행위이며 변화를 과장하는 것은 투항과 변사의 자기변명일 뿐이다."

〈정리:정미경 記者〉

실증주의적 정치현상 설명

내가하는 공부

백 승 현
〈정경대 교수, 정치외교〉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의문 가운데 하나가 정치학이란 무엇을 공부하는 학문인가 하는 것일 것이다. 대체로 국회의원이 되려하고 잘하면 대통령도 바라보는 막연하나마 큰 -혹황된 꿈일 수도 있는-포부를 가진, 일견 속물적인 사람들이 하는 공부라는 것이 정치학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이다.

그러면 정치학은 정말 꿈을 키우고 먹으며 살다가 그 꿈속에 사그라져 가는 사람들이 무위도식하며 하는 학문인가? 만일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이만저만한 오해가 아닐 수 없다.

내가 하고 있는 공부는 정치학 중에서도 정치철학이라고 불리우는 분야이다. 보통 정치학은 그 방법론적 경향에 따라 정치과학과 정치철학으로 대별되기도 하고, 정치사상·비교정치·국제정치 등 하위영역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정치철학이란 용어는 정치지도자들이 갖춰야 할 덕목으로서 '정치철학이 있(었)다'느니 할 때 흔히 운위된다. 그러나 이 경우 정치철학은 어떤 정치적 신념이나 주의 주장을 일컫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하는 공부'로서의 정치철학과는 구별되어 진다.

정치철학은 또한 정치사상, 정치이론(특히 규범적) 등의 용어와 때로 혼용되어지기도 하는데, 이들 용어의 함의가 항상 정교하게 일치하지는 않는다. 그런 점에서 나는 '철학적 정치학'이란 말을 즐겨 쓰는 편이다.

그러면 철학적 정치학은 무엇을 하는 학문인가? 오늘날 학문이라고 하면 뭔가 물질적 생산적인 것이어야 하고, 지식(knowledge)이라고 하면 정보(information), 자료, 기술 등 손에 잡을 수 있는 것을 주고 받는 것으로서 취업 및 출세욕구에 부응하고, 또 경제적 수치로 환산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어야 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경향이 있다. 그리하여 정치학 내에도 실증주의 민능적 사고의 결과로써 정치현상을 묘사·설명·예측하는데 학문적 목표를 두는 흐름이 있다. 그러나 철학적 정치학은 정치적 실존체로서의 인간 자신에 관한 연구로부터 시작하여 그 인간들이 영위하는 '정치'에 대하여 사유 비판하고 나아가 치유의 처방전을 모색하고자 하는 학문이다. 그 사유와 비판의 대상은 정책결정을 담당하는 직업적 정치인들인 정치지도자들, 즉 '타자'뿐만 아니라 주권자로서 정치의 주체이자 동시에 객체인 일반 시민, 즉 '나 자신'도 포함된다.

이러한 비판적 사유의 일환으로서 그동안 정치적 실존에 관한 인간 자신의 탐구의 긴 여정(旅程)이라 할 수 있는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어거스틴, 아퀴나스, 마키아벨리, 홉즈, 록크, 루소, 버크, 해겔, 맑스, 그리고 자유주의 등에 이어 현대에 이르기까지 위대한 정치 철학자들의 세계를 현대를 사는 우리 자신의 관점과 맥락에서 간접제험해 보기도 하는 것이다. 그러한 속에서 스스로 1993년 한국에서의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또는 칸트, 맑스가 되어보기도 하면서 오늘의 정치현실 속에서 우리 자신-타자와 나를 포함한-의 정치적 행위를 음미 반성하고 우리의 미래를 가늠함으로써 '나'와 '공동체'-작은 규모로부터 국가, 사회, 인류공동체에 이르기까지-의 행복(eudaimonia)을 추구하는데 보탬이 되고자 하는 것이다.

데스크칼럼

조심스런 믿음이 배신으로 느껴질때

오 홍 섭
〈본보 편집장〉

오늘날 양심이란 말이 과연 통하는 사회인가?

이 물음에 명쾌하게 "예, 아니오"라고 자신있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

질문에 대한 해답은 하나라고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도 더러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지금 우리 사회의 흐름을 곰곰이 살펴보면 이 질문의 답을 바로 얻을수 있는 판단의 기준이 모호하다는 느낌이 든다.

군사정권 시대의 막을 내리고 자타가 공인한다고 자부하는 '학실한' 문민정부의 출범을 본 지도 두달하고 몇달이 지났다. 많은 변화가 사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느끼기도 한다.

현상적으로 보여지는 이러한 모습들속에서 지금의 정부가 과거의 정부와는 이름만이 아닌 무언가 다르다는 생각이 들지도 모른다. 하지만 현상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해결행태와 근본적인 구조적 모순들의 해결과는 다름을 우리들은 간과해서는 안될것이다. 당연히 우리의 땀, 우리의 거리인 인왕산과 청와대 앞길은 개방되어졌어야 하고, 국민의 뜻을 대변해야 할 국회의원들의 각종 비리는 분명히 처벌받아 마땅할 것이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비리의원들이 처벌의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고, 처벌받은 자들도 뉘우침과 반성보다는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양심의 가책은 커녕 어떻게하면 자신의 명분을 만들어 자기를 합리화 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들을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 개혁은 어느 한 개인의 의지가 아닌 그 수족들의 전폭적인(?) 지원없이는 이루어질수 없음을 말한다.

"기다림의 한계는 짧다"

또한 이들이 무엇을 일안하고 행할 때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양심을 가지고 더도 말고 덮도 없이 부끄럽지 않은 행동을 하였다면 연일 보도되는 비리의 연속에 대한 놀라움이 조금은 덜하지 않나 생각해보기도 한다.

여기서 양심이란 말 자체가 통용되지 않는 사회현실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착잡한 심정과 왜 진리와 정의가 구현되어져야 할 사회가 비양심과 비리로 얼룩져야만 하는지 또 구조적인 모순의 해결방안은 정말 요원한 난제인지 집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양심'이란 말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양심이란 도덕적 가치를 판단하여 정선(正善)을 명령하고 사악을 물리치는 통일적인 의식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다. 여기서 말하는 도덕적 가치판단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인간의 사심없는 선의 표현이라고 말할수 있겠다. 그러나 현실은 어떠한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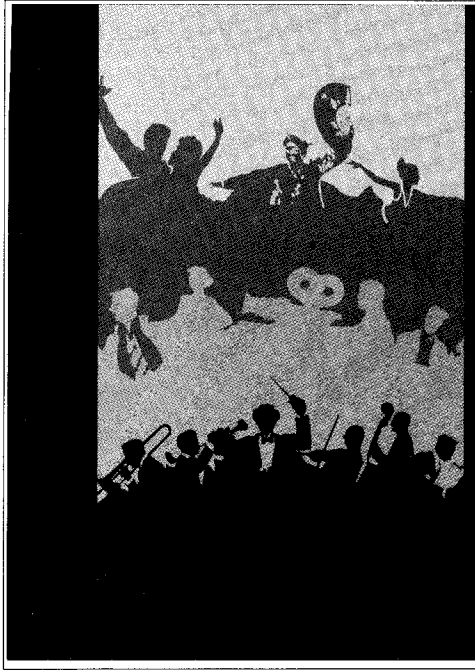
억대의 금전이 결코 많은 것이 아닌것처럼 느껴지게 하는 사회속에서 이러한 사실을 이상이 아닌 현실로 받아들여야 하는 서민들의 심정을 그들은 알고나 있는지 물음을 던지고 싶다.

과연 이들에게 있어 양심이란 무슨 의미로 받아들여 질까. 양심이란 말 자체가 그들에게는 거추장스런 굴레로 여겨지고 있을지도 모른다.

'이들은 흔히 자신들을 합리화 할때 '양심적'이란 말을 자주 인용한다. 양심적이란 양심이 있는, 양심에 의하는 상태 즉, 양심이 명하는 바에 따라 행동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들이 말하는 '양심적'이란 의미가 우리들이 알고 있는 '양심적'인 것과는 다른 의미인가 하는 의구심마저 들게 한다.

그들은 인간의 최저생존권을 위해 오늘 이 순간에도 가슴조이며 살고 있는 수많은 우리 국민들의 원망 소리가 곳곳에서 들리고 있음을 알지 못하고 있다. 모범과 실천이 담보되지 않은 '새로운 한국창조'는 '그림속의 떡'일 수 밖에 없다는 너무나 단순한 논리가 그들에게는 한낱 국민들의 '무리한 요구'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다.

우리의 바램은 결코 무리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인간이 인간답게 살고 대접받기를 원하며 노력한만큼 이뤄지기를 바랄뿐임을 알아야 한다. 매일 접하는 신문과 방송에서 '비리', '부정', '금권'이란 말대신에 '믿음'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기사와 소식을 지금은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기다림의 한계는 그리 오래 지속되지 않음을 그들은 알아야 한다. 조심스런 믿음이 배신으로 느껴질때 다시한번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음을 상기해야 할때가 지금임을 그들은 깨달아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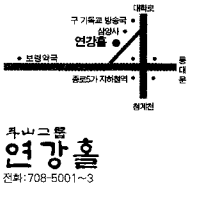
새로운 공연문화의 시작-

연강홀이
새로운 공연문화의
막을 올립니다.

연강홀은 다양한 장르의 무대로
더 많은 사람들이 문화예술의 진수를
만끽할 수 있는 곳입니다.
좋은 문화를 더 많은 이들에게-
연강홀이 새로운 공연문화로
여러분께 가깝게 다가갑니다.

개관 기념공연 프로그램

- 개막제:5월1일
- 음악제:5월2일~5월5일
  - -서울신포니에터 심내악연주회:5월2일
  - -김덕수 사물놀이와 재즈그룹 RED SUN의 만남:5월3일
  - -가곡과 아리아의 밤:5월4일
  - -어린이날 가족음악회:5월5일
- 인간문화재 이매방 선생 초청무용공연:5월6일
- 개관축하연극 "거울 시자들"공연:5월8일~5월30일 (출연:고두심,송재희,하상길 외)
- 권인하,이덕진 조인트 콘서트:6월5일,6월6일
- 한.미.일 WORLD FREE JAZZ 페스티벌 6월12일,6월13일 (출연:김대환, LEO SMITH,아마시타 요스께 외)



푸르그룹
연강홀
전화:708-5001~3